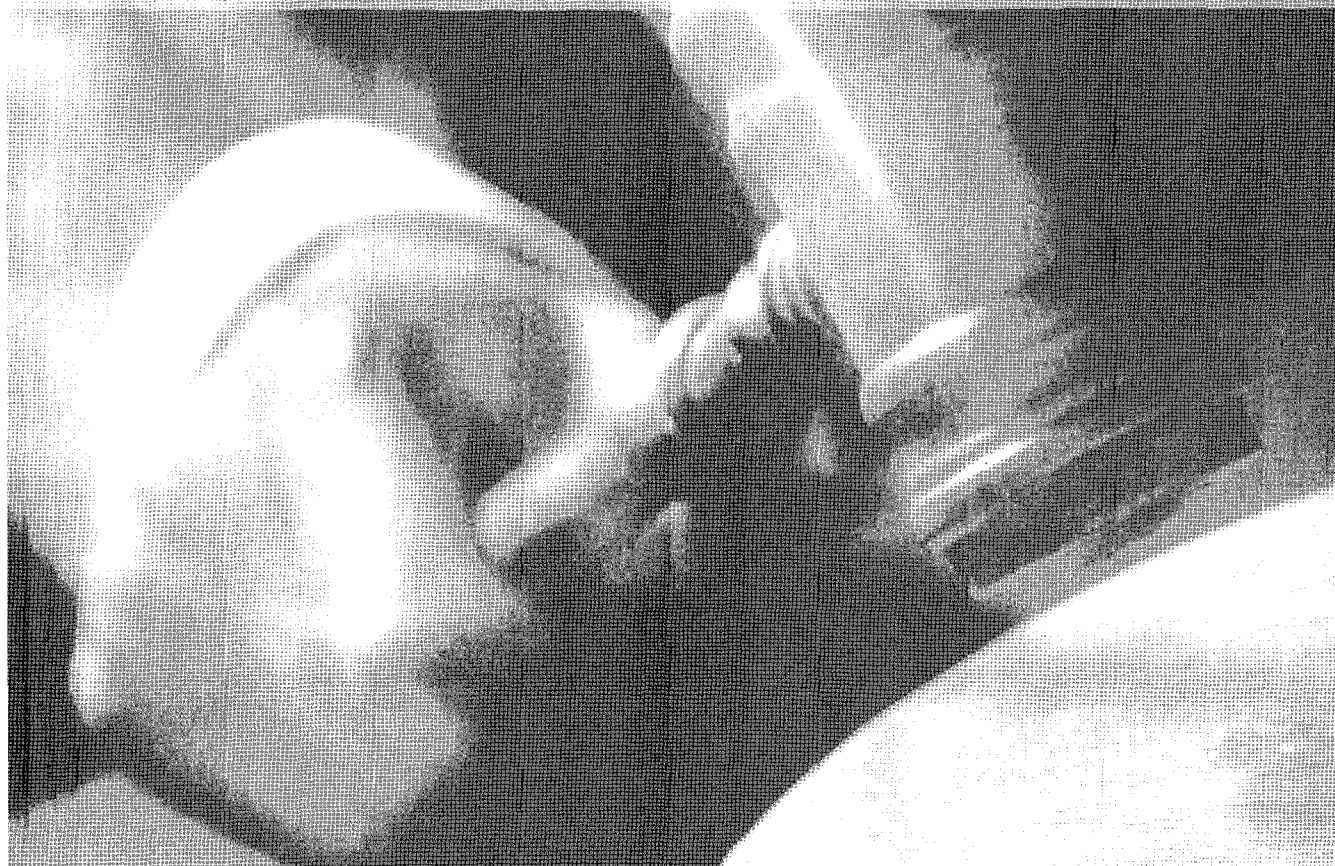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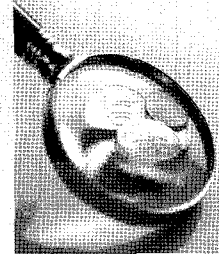


● 산업동향

1. 한국중소, 선진국보다 금융애로 크다
2. "상장기업 86%가 사회적책임 취약"
3. 중소기업중앙회 조사, 인력난 심화 영향·업체당 2.5명 골
4. 고용시장 '혼풍'...7월 취업자 33만5천명 ↓
5. 직장인 애환 담은 '직장인 신조어'
6. 중소기업 72.9%, "고졸 채용한다"
7. 중소기업 63.9% "대체공휴일제 도입 반대"
8. 중소기업 체감경기 석달째 하락세
9. "산업기능요원제도 존속돼야"
10. 중소기업 85% "환율하락, 채산성에 부정적"
11. 중소기업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 확대
12. 중소기업 10곳중 4곳 "인력부족 심해"
13. 경기도 기업애로 온라인 처리 '성과'
14. "대기업 범위 상호출자제한집단으로 한정"
15. 중소기업, 외국인 근로자 못구해 '아우성'
16. 소규모기업 절반, 주40시간제 시행 못해
17. 정부, 경제·금융상황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18. 위기 이후 대외 건전성 지표 대폭 개선
19. IMF, "한국 경제성장률" 올해 4.5%, 내년 4.2% 전망



1. 한국중소, 선진국보다 금융애로 크다

한국 중소기업인들은 사업확장시 다른 나라에 비해 금융과 관련한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세계 36개국 중소기업 실태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업체들은 가장 영향이 큰 경영 제약 요인으로 '금융비용'을 꼽았다.

국내 업체들이 '금융비용'으로 느끼는 제약의 정도를 점수화했을 때는 49점으로, '불필요한 행정' (15점), '수요 감소' (8점), '부족한 노동숙련도' (5점)보다 크게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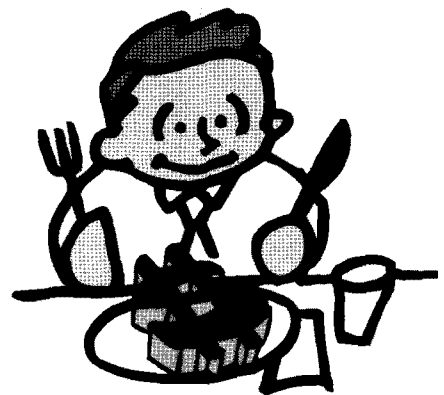
반면 일본은 수요 감소(74점), 독일은 불필요한 행정 (13점)이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지적됐으며 조사대상인 36개국 전체로 살펴보면 수요 감소(6점)를 제약 요인으로 꼽는 기업이 많았다.

'대출기관의 업무 협조가 잘 되는가'라는 항목에 대해서도 한국은 39%가 '잘 된다'는 응답을 내나 전체 평균인 69%보다 훨씬 낮았다.

일본(81%), 미국(81%), 독일(62%) 등의 중소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대출 협조에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한국보다 수치가 낮은 국가는 36개국 중 아르헨티나(15%) 뿐이었다.

또 한국 중소기업인들은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에 대해서도 '자금 압박'이라는 응답을 가장 많이 내놨으며 '경제상황', '경쟁사의 존재', '장기 계획의 압박' 등의 순으로 답변이 이어졌다. 그러나 한국 중소기업들은 43%가 1년전에 비해 고용이 증가했다고 답해 경제위기를 겪은 선진국중 고용부분이 가장 빨리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구원 관계자는 "한국은 다양한 정부 재정지원과 금융상품으로 금융 접근성 자체는 다른 나라에 비해 뛰어나지만, 이를 활용하기에는 금융기관들의 문턱이 너무 높다"며 "전체적으로 국내 중소기업은 다른 나라의 두 배에 이르는 금융 압박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서둘러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2. "상장기업 86%가 사회적책임 취약"

국내 상장기업의 86%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사회적 책임 취약등급에 해당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는 세계적으로 기업의 윤리경영, 친환경 경영, 사회공헌활동이 강조되고 있지만 아직 국내 기업들의 인식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최근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668곳을 대상으로 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등 종합평가에 따르면 86%인 575개 기업이 5등급 중 4등급 이하인 B(취약)와 C(매우 취약) 등급을 받았다.

B등급은 전반적으로 기업의 지배구조, 사회, 환경 분야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 취약해 각 부분에서 개선이 부분적으로 필요하고 C등급은 이런 개선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업이다.

이런 활동이 가장 우수한 A+ 등급 기업은 4곳(0.6%)에 불과했다. 양호한 수준의 A등급 기업은 40곳(6.0%) 정도였다. 사회적 책임 활동이 보통 수준인 `B+` 등급기업도 48곳(7.2%)에 그쳤다.

통합 ESG 평가에서 A+ 등급을 받은 기업은 SK텔레콤, KB금융, 포스코, 하이닉스 4곳이다.

기업지배구조원은 그동안 주주권리보호, 이사회 운영, 공시 등의 활동을 평가해 기업의 지배구조(Governance)에 대한 등급을 매겨왔는데 이를 사회(Social), 환경(Environment)까지 통합 평가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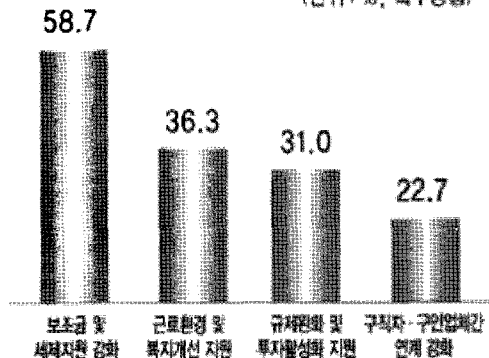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국내 기업들은 지배구조 부문보다 사회, 환경 부문에 대한 책임 의식이 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배구조 부문에서 B등급 이하 기업은 515곳으로 전체의 77.1%였지만 사회 부문은 558곳으로 83.5%, 환경 부문은 87.4%에 달했다.

3. 中企중앙회 조사, 인력난 심화 영향...업체당 2.5명 풀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대책

(단위: %, 복수응답)



최근 경기회복과 함께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소 제조업체의 절반 이상은 하반기에 인력채용 계획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중소제조업체 300곳을 대상으로 '중소제조업 인력채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의 53.3%가 올 하반기 신입 직원 채용계획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평균 채용예정 인원은 2.5명으로 집계돼 2009년 하반기(1.1명) 이후 증가추세로 돌아서 금융위기 이전 수준인 2.7명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2.3명 수준이었다.

직종별로는 생산직 2.1명, 사무직·기타 0.3명, 연구개발직 0.1명으로 생산직 인력에 대한 채용수요가 높았다.

채용 이유(복수응답)에 대해서는 '자연감소 인원에 대한 충원'이라는 응답이 57.5%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현재 인원의 절대 부족'(44.4%)과 '경기호전 예상에 따른 생산규모 확대'(16.97%) 등의 응답이 이어졌다.

채용 계획이 없는 기업들은 그 이유로 '적정인원을 유지하고 있어서'(76.4%), '경기전망 불확실 때문'(17.1%), '경영악화로 사업을 축소해서'(12.1%) 등의 답변을 내놨다.

특히 상시근로자 20인 미만 기업은 '경영악화, 사업 축소'(22.7%)와 '높은 인건비 부담'(13.6%)을 이유로 꼽는 경우가 많아 소규모 기업은 여전히 경기회복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건비 부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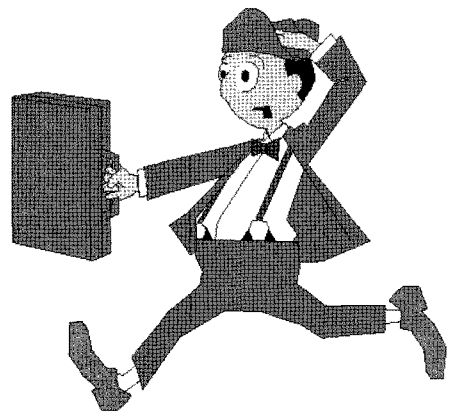
인력 수급 상황과 관련해서는 '부족하다'고 응답한 업체가 42.7%에 달했다. 이는 2009년 6월 조사에서 21.9%를 기록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최근 중소기업의 인력난 심화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로는 '중소기업에 대한 낮은 인식으로 구직자들이 취업을 기피한다'는 응

답이 44.7%로 가장 많았으며 이밖에 '적합한 경험자나 책임자가 없어서'(33.3%), '임금 및 복리후생 수준이 낮아서'(30.3%) 등 순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들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시 보조금 및 세제지원 강화'(58.7%), '근로환경개선 및 복지개선 지원'(36.3%), '규제완화 및 투자 활성화 지원'(31.0%), '구직자와 구인업체간 취업연계 인프라 강화'(22.7%)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올 하반기 채용수요가 최근 들어 가장 높지만 중소기업에 대한 취업기피 현상으로 채용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특히 주40시간제 추가도입으로 인건비 부담에 시달리는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 및 세제개편 등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4. 고용시장 '활풍' ... 7월 취업자 33만 5천명 ↑

7월 취업자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33만5천명 증가해 10개월 연속 30만~40만명대의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는 2천 46만 6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3만 5천명 증가했다.

올해 들어 월별 취업자 증가폭은 1월 33만 1천명, 2월과 3월 각각 46만 9천명, 4월 37만 9천명, 5월 35만 5천명, 6월 47만 2천명 등이었으며, 지난해 10월 이후 10개월 동안 30만~40만명대의 증가세를 보였다.

7월 실업률은 3.3%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4%포인트 하락했고 청년층(15~29세) 실업률도 7.6%로 작년 동월(8.5%)보다 0.9%포인트 낮아졌다.

7월 고용률은 60.0%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2%포인트 상승했다. 고용률은 남자가 71.1%로 작년 동월과 같았고 여자는 49.3%로 0.2%포인트 높아졌다.

연령별 취업자 수는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해 20대(-5만 1천명)와 30대(-5만 2천명)는 감소했으나 나머지 연령대에선 모두 증가하는 흐름이 이어졌다. 성별로는 남자가 17만 6천명(1.2%), 여자는 16만명(1.6%) 늘었다.

산업별 취업자 증가폭은 전기·운수·통신·금융업 19만3천명(6.9%)과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18만 8천명(2.3%), 제조업 4만명(1.0%) 등이다. 반면

감소업종은 농림어업 -5만 5천명(-3.1%), 건설업 -5만 5천명(-3.1%) 등이다.

직업별로는 사무종사자가 26만 8천명(7.1%), 관리자·전문가 6만 8천명(1.3%), 서비스·판매종사자 3만 천명(0.6%), 기능·기계조작·단순노무종사자 3만 4천명(0.4%) 등은 증가한 반면 농림어업숙련종사자는 6만 8천명(-4.1%) 줄었다.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를 보면 임금근로자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43만 9천명(2.5%) 증가했고 비임금근로자는 10만 4천명(-1.5%) 감소했다.

임금근로자 가운데 상용근로자는 61만 1천명(6.0%) 늘어난 반면, 임시근로자는 7만 8천명(-1.5%), 일용근로자는 9만 4천명(-4.9%) 줄었다.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356만 2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4만 1천명(4.1%) 늘었으나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9만명(0.4%) 증가에 그쳤다.

7월 실업자는 83만 7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9만 5천명(-10.1%) 감소했다. 성별로는 남자가 6만 8천명(-11.3%), 여자가 2만 7천명(-8.0%) 줄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작년 동월 대비 23만 1천명(1.5%)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구직단념자는 1만 9천명 늘었으나 취업준비자는 4만 3천명 감소했다.

5. 직장인 애환 담은 '직장인 신조어'

직장인 사이에 유행하는 신조어를 살펴보면, 그들의 관심 대상과 불만을 읽을 수 있다. 취업포털 인크루트(대표 이광석)가 최근 직장인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신조어를 정리했다. 하루하루가 치열한 직장인들의 고충과 애환이 담겼다.

■ 월급루팡= 회사에서 하는 일 없이 월급만 축내는 직원을 일컫는 말이다. 보통은 월급도둑, 월급잉여 등으로 표현하지만 여기에 도둑의 대명사인 '루팡'을 활용하기도 하는 것이다. 월급루팡의 주된 행태에는 '하는 일도 없으면서 바쁜 척 하기' '업무 중에 딴짓 하기' '자신의 업무를 동료나 부하직원에게 미루기' 등이 있었다.

■ 월급로그인, 월급로그아웃 = 인터넷 사이트에서 로그인, 로그아웃을 하는 것처럼 월급이 통장에 순식간에 들어왔다가 순식간에 빠져나간다는 의미다. 이곳저곳 쓸 데가 많지만 월급은 턱없이 부족하고, 부족한 월급은 카드 값을 갚고 나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 보통인데 직장인들이, 이러한 현실을 '월급이 로그인·로그아웃했다'고 허탈하게 표현하는 것이다.

■ 회의(會議)주의자 = 보통 회의주의자라 하면 모든 것을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즉 매사에 의심을 품고 부정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사람을 뜻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회의는 의심을 품는다는 뜻의 회의(懷疑)가 아닌, 여럿이 모여 의논한다는 뜻의 회의

(會議)이다. 즉 틈만 나면 별 의미 없이 미팅을 소집하는 상사나 선배직원들을 '회의주의자'라고 비꼬아 부르는 것이다.

■ 오피스브런치족(族) = 브런치는 블랙퍼스트(Breakfast)와 런치(Lunch)의 합성어로, 우리말로로는 '이른 점심식사' 정도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다. 오피스브런치족은 그러한 브런치를 사무실에서 즐기는 직장인들을 이르는 말이다. 바쁜 아침, 끼니를 거를 수 밖에 없는 직장인들은 간단한 아침식사 거리를 사서 출근하지만, 정작 출근 직후에는 업무 때문에 손을 대지 못하다가 10시에서 11시 사이에 본의 아니게 사무실에서 브런치를 즐기는 것이다.

■ 코피스족(族) = 코피스는 커피(Coffee)와 오피스(Office)의 합성어로, 코피스족은 커피전문점에서 휴대전화나 노트북 등을 이용해 업무를 보는 직장인들을 말한다. 즉 커피전문점을 사무실처럼 활용하는 것이다. 커피전문점은 커피를 즐길 수 있다는 점 외에도 많은 곳이 무선인터넷을 갖추고 있고, 상사나 동료가 지켜보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업무의 장소로 인기가 많다.



6. 中企 72.9%,
“고졸 채용한다”

최근 대기업의 고졸 채용이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상당수는 이미 고졸을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인사포털 인크루트(대표 이광석)가 중소기업 인사담당자 37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 정규직 신입사원으로 고졸 인력을 채용하고 있다는 기업이 전체의 72.9%에 달했다.

고졸을 채용하는 이유로는 ‘실제로 업무능력이 대졸과 차이가 없어서(49.3%)’라는 답변이 절반 가까이로 가장 많았다. 학력에 차이가 있을 뿐 실제 역량에서는 그다지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다.

고졸 인력의 장점을 높게 평가하는 대답도 많았다. ‘대졸에 비해 성실성, 정직성 등이 뛰어나서(15.1%)’, ‘상대적으로 임금을 적게 지급할 수 있어서(14.3%)’와 같이 경제적인 이유를 드는 인사담당자도 있었다. ‘상대적으로 실무경험이 많아서(9.9%)’, ‘업무 특성상 대졸의 지식이 필요하지 않아서(5.1%)’ 등도 고졸을 채용하는 이유가 됐다.

또한 이렇게 채용된 고졸 인력은 같은 직급의 대졸 인력에 비해 업무 능력에 차이가 없다(73.2%)는 인사담당자가 대다수였다. ‘대졸보다 다소 낮다(20.2%)’, ‘대졸보다 매우 낮다(4.0%)’, ‘대졸보다 다소 높다(2.6%)’ 등의 부정적인 의견은 적은 편이었다.

하지만 채용한 고졸 인력에게 같은 직급의 대졸 인력에 비해 낮은 임금을 지급한다는 기업이 36.0%였고, 고졸 인력은 특정 부서에서만 채용한다는 기업도 36.8%로 나타났다.

한편 고졸을 채용하지 않는 기업은 그 이유로 ‘대졸 인력이 너무 많아서 고졸을 뽑을 이유가 없어서’(47.5%)라는 점을 들었다. 이미 대학진학률이 80%를 넘는 현실에 굳이 고졸을 뽑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 외에도 ‘실제로 업무능력이 대졸과 차이가 있어서’(24.8%) ‘업무능력이 대졸만 못할 것이라는 인식(편견)이 있어서’(11.9%) ‘이미 기존 인력들이 대졸이 많아서 형평성 차원에서’(5.9%) 등의 답변이 이어졌다.

설문에 참여한 인사담당자들 중 71.3%는 기업들이 고졸 인력 채용을 꺼리는 것에, 대졸보다 업무능력이 못할 것이라는 선입견이나 편견이 작용하고 있다고 봤다.

기업의 고졸 채용을 늘리기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부분은 전문계고 집중 육성 및 인재 양성(38.6%)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고졸 출신에 대한 선입견 및 학벌주의 탈피(35.9%)를 드는 인사담당자도 만만치 않았다.

그 밖에 채용 시 학력을 차별하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규제(12.9%) 고졸 인력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9.7%) 등의 응답이 있었다.

7. 中企 63.9% “대체공휴일제 도입 반대”

중소기업의 60% 이상이 정부가 추진중인 대체공휴일제 도입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최근 전국 중소기업 441곳을 대상으로 ‘대체휴일제 도입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공휴일제 도입에 반대 의견을 밝힌 업체는 63.9%로 찬성 의견(35.4%)에 비해 1.8배나 높게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제조업(70.5%)이 비제조업(58.0%)보다, 규모별로는 소상공인(64.2%)이 중기업(58.4%)보다 반대 의견 비율이 높았다. 반대이유로는 ‘공휴일이 늘어도 될 수가 없어 대기업·공공기관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기 때문’(50.4%)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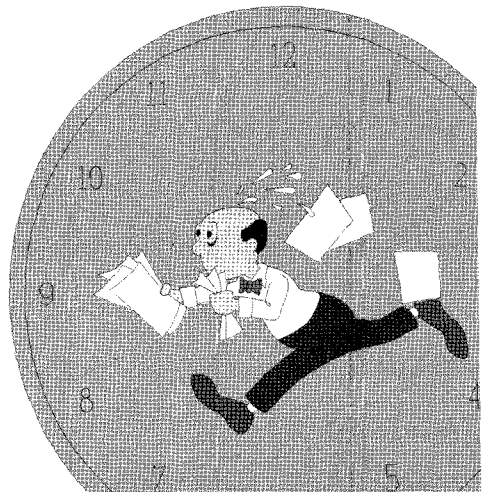
이어 ‘인건비 증가 우려’(36.6%), ‘휴일이 늘어도 소비가 늘지 않아 내수는 활성화 되지 않을 것’(13.0%) 등의 순이었다. 실제 중소기업 경영자들의 52.5%는 ‘대체공휴일제가 도입되더라도 직원들은 평소대로 일하게 될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반면 대체휴일제 도입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근로자들의 휴식권 보장’이 44.2%로 가장 높았고 근로자들의 여가 증가가 늘어나 생산성이 향상될 것(39.1%)이란 답변이 뒤를 이었다. 다만 휴일이 늘어남에 따라 근로자들의 소비가 늘어나 내수활성화가 기대되다는 16.7%에 불과해 정부에서 기대하는 내수활성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대체공휴일제 도입으로 중소기업은 휴일이 증가하더라도 휴일에 소비활동을 하거나 쉬면서 재충전을 하기보다는 평소대로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내수활성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중소기업의 인건비 증가와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상대적 박탈감만 커지는 만큼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열린 ‘민생점검 및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장차관 국정토론회’에서 법정공휴일이 토·일요일과 겹치면 다음 평일을 휴일로 지정하는 대체공휴일제의 도입을 핵심 추진과제로 선정했다.



8. 중소기업 체감경기 석달째 하락세

중소기업 경기전망지수가 3개월 연속 하락해 지난 2월 이후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최근 중소 제조업체 1천 425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기전망 조사결과, 8월 중소기업 업황전망건강도지수(SBHI)는 91.6으로 전월 93.6보다 2.0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긴 장마와 하계휴가 등 계절적 요인과 함께 대내외 불안요인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경기침체 우려가 깊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기업규모별로는 소기업(88.1)과 중기업(98.8) 모두 하락했으며 중기업은 이달 들어 기준치 미만으로 떨어졌다. 공업부문별로는 경공업(87.3)과 중화학공업(95.4) 모두 하락했다.

기업유형별로는 일반제조업(90.2)은 소폭 하락한 반면 혁신형제조업(96.6)은 전월보다 4.1포인트나 하락해 부정적으로 전망됐다.

경기변동 항목별로는 원자재 조달사정(93.1)만 전월 대비 1.3 포인트 상승했을 뿐 생산(92.1), 경상이익(86.7), 수출(93.6) 모두 기준치 미만을 지속하며 하락세를 나타냈다.

업종별 전망을 살펴보면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87.9),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69.1), 비금속광물

제품(77.2)등 업종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으며 특히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97.6) 업종은 전월대비 5.5포인트나 하락하며 기준치 이하로 떨어져 부진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음료(109.2), 자동차 및 트레일러(103.1), 의류, 정밀과학기기 및 시계(107.9), 기타 운송장비(104.5)업종은 기준치를 상회하는 가운데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

7월 중소제조업 업황실적은 전월(89.3) 보다 2.3포인트 하락한 87.0으로 나타났다. 기업유형별 실적을 보면 일반형기업(85.5)은 전월대비 2.5포인트, 혁신형기업(92.5)은 1.7포인트 하락했다.

7월중 중소기업 최대 경영애로(복수응답)는 원자재 가격상승(60.1%)으로 나타났으나 내수부진(50.0%), 계절적 비수기(18.4%), 환율불안(11.4%) 등의 응답 비율이 전월대비 크게 상승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제조업체 1천425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월 평균 가동률은 72.5%로 전월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동률은 지난 4월 73.0%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소폭 하락하며 보합세를 보였다.

기업규모별로는 소기업(70.5%)은 소폭 하락했으나 중기업(76.8%)은 소폭 상승했다. 기업유형별로는 일반제조업(72.1%)은 전월과 같았으나 혁신형제조업(74.0%)은 소폭 하락했다.

9. “산업기능요원제도 존속해야”

산업기능요원제도가 경남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에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남지역의 대다수 중소기업들은 산업기능요원 제도의 존속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가 경남지역 113개 병역지정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1 경남지역 산업기능요원 활용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업체의 대다수(92.6%)가 제도존속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기능요원제도 활용이유에 대해서는 응답업체의 48.0%가 ‘인력확보의 상대적 용이성’을 꼽았고, 다음으로 ‘제도 활용을 통한 장기고용 유도’(22.3%), ‘상대적 저임금을 통한 우수기능인력 확보 가능’(19.4%), ‘고교 연계 맞춤형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인력 지속 활용 가능’(9.7%) 등 순으로 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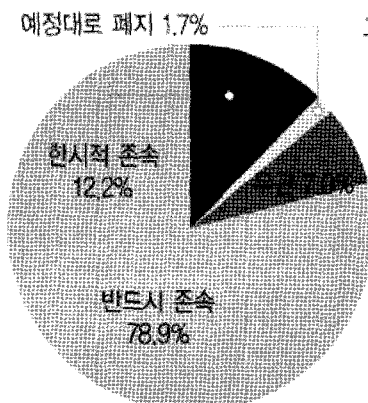
산업기능요원제도가 폐지될 경우 대체인력 확보방안으로는 ‘외국인근로자 고용’(53.0%)이 가장 높았고, 이어서 ‘정규직 채용’(30.0%), ‘비정규직채용’(10.0%), ‘설비자동화’(6.0%), ‘사업장 해외이전’(1.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산업기능요원 중 의무 복무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고 있는 비율은 현역 27.2%, 보충역 17.8%로, 이 제도가 청년 기능인력 경력유지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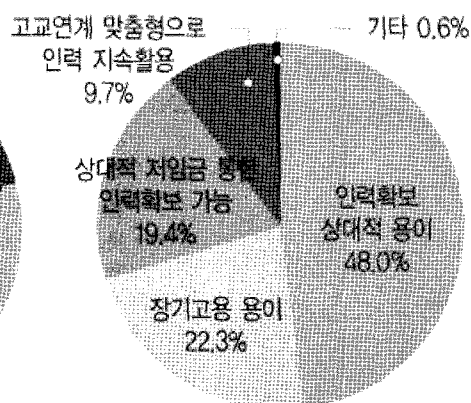
산업기능요원제도의 발전을 위해 개선해야 할 과제로는 응답업체의 67.4%가 ‘산업기능요원제도 배정인원 확대’를 꼽았으며 이어서 ‘신청·접수 및 선정 절차 간소화’(27.5%), ‘지역별, 업종별 배정인원 탄력운영’(20.0%), ‘업체와 산업기능요원간 매칭률 제고’(5.6%) 등 순으로 나타났다.

중앙회 경남지역본부 김기훈 부장은 “현재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인력난인데, 그동안 인력

제도 존속 필요성



제도 활용 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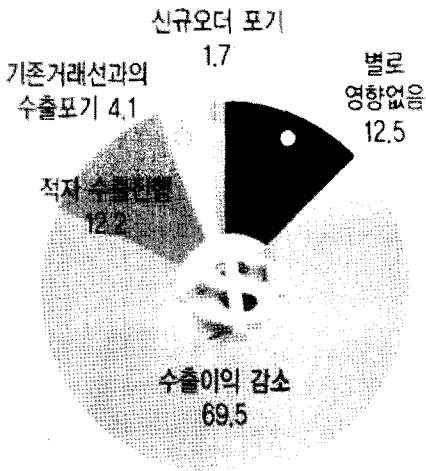
산업동향

수급에 크게 기여해 온 산업기능요원제도마저 폐지된다면, 청년 기능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지방 소재 기업은 더욱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제도 폐지보다는 유지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산업기능요원제도는 당초 내년부터 전면 폐지할 계획이었으나 병 복무기간 3개월 연장에 따라 2015년까지는 유지할 예정이다.

10. 中企 85% "환율하락, 채산성에 부정적"

환율하락의 영향 (단위:%)



중소기업중앙회는 수출 중소기업 292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의 85.1%가 '최근 환율 하락이 채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을 했다고 최근 밝혔다.

'매우 부정적'이라고 답한 업체는 40.3%, '부정적'이라는 답한 업체는 44.8%였다.

응답 업체의 69.5% '이미 수출 이익이 감소했다'고 답했으며 12.2%는 '적자 수출을 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채산성 유지를 위한 적정 환율에 대해서는 평균 1달러당 1,118.6원이라고 답했다.

수출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환율하락에 따른 채산성 악화' (31.2%), '원자재 수급 및 가격변동' (25.1%) 등 순으로 나타났으며,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정부가 중점적으로 지원할 사안을 묻는 항목에서도 '안정적 환율운동' (34.1%)을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 '해외 판로 개척 지원' (22.4%), '수출금융 지원' (20.3%), '원자재 수급 지원' (9.8%) 등의 답변이 이어졌다.

중소기업중앙회 김태한 통상진흥부장은 "수출 중소기업이 환율하락에 따른 채산성 악화를 겪고 있는 동시에 원자재 수급 및 가격변동에 대한 애로를 토로하고 있다"며 "결국 환율이 상승하더라도 수출 등에는 유리하지만, 원자재 부담은 가중되는 '딜레마 상황'을 야기하므로 적정한 수준의 환율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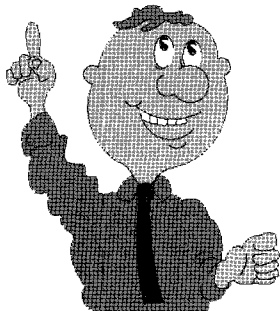
11. 中企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 확대

조달청은 소기업·소상공인의 수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8월 18일 도입된 '중소기업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을 확대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 운영요령'을 개정,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 기존 20개 제품에 한국전력의 수요가 많은 제어케이블을 새로 추가하고, 20억원 이상의 비닐절연전선, 강심알미늄연선, 전기용연선, 제어케이블(신규) 등 전선류 4개 제품에 대해서는 총액계약뿐 아니라 단가계약까지 확대, 적용키로 했다.

또 공동수급체 구성원에는 포함됐지만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지 않은 구성원은 입찰참가자격 제한(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를 할 예정이다.

시장규모가 크지 않은데도, 생산업체 수가 많아 과당경쟁 우려가 있는 전선제품류에 대해 보다 많은 영세 중소기업에게 수주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 이번 개정의 취지라고 조달청은 설명했다.



중소기업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제도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중소기업청장 지정 195개 제품) 중 규격과 품질에 차이가 적은 레미콘, 아스콘 등 21개 제품을 조달청장이 별도로 지정·고시, 20억원 이상(레미콘, 아스콘은 50억원 이상) 구매시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공동수급체만 입찰참가를 허용하는 것이다.

중소기업 공동수급체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1인 이상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지분율도 20% 이상 돼야 한다.

12. 中企 10곳중 4곳 "인력부족 심해"

취업자수가 16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조업 부문의 인력부족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일자리 현장 지원활동'의 일환으로 전국 9천 725개 중소기업을 방문 조사한 결과 전체의 42.6%인 4천 115개 기업이 인력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이 적정하다는 업체는 54.1%, 인력 과잉이라는 업체는 3.3%로 집계됐다.

향후 인력 사정에 대해서는 적정하다는 응답이 54.1%였으며 부족할 것이라는 응답도 40.0%에 달했다.

산업동향

특히 숙박·음식점업, 제조업 등에서 인력 부족이 심각할 것으로 전망됐고 보험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등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난 못지않게 구인난도 심각해 대부분의 사업장(73.2%)에서 구인난을 겪고 있거나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인난의 원인은 적격인력 부족, 구직자 눈높이문제, 낮은 임금·복지후생 순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지역 사업장은 적격인력 부족으로, 지방의 경우 교통 불편 문제가 인력난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조사대상 사업장의 3분의 2는 국가 고용정보망인 워크넷을 이용하지만 아직도 상당수(32.8%) 사업장은 구인시 워크넷보다는 민간취업기관 등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 채용방법은 50인 미만 사업장은 자체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비율이 높았고 300인 이상 사업장은 가족, 친지 등의 추천을 선호해 중규모 이상 기업의 인력채용 방식이 좀 더 개방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 경기도 기업애로 온라인 처리 '성과'

사례1 공장증축을 계획하고 있던 오산시 A업체는 농업진흥구역을 이유로 공장증축 허가를 받지 못해 사업확장을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경기도

기업SOS팀에 도움을 요청했고, 기업SOS팀이 면밀한 검토를 거쳐 농업진흥구역 지정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을 발견해 증축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사례2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한 용인시의 B업체는 공장 증축 시 건폐율이 20%에 불과해 추가 투자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경기도가 운영 중인 기업SOS시스템은 용인시와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해 공업지역으로 변경했다. B업체는 향후 1,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경기도가 운영 중인 온라인 기업애로 통합처리시스템인 '기업SOS넷'이 경영애로를 겪는 도내 기업에 단비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올 상반기 동안 기업SOS넷은 4,434개 업체로부터 6,157건의 애로사항을 접수해 이중 96.9%인 5,967건을 처리했다.

건당 평균 처리일수도 4.9일로 5일 이내로 들어왔으며, 현재 미처리된 190건에 대한 최종 마무리 작업이 진행 중이다.

시·군별로는 부천시(776건), 포천시(688건), 용인시(659건), 성남시(646건), 시흥시(412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애로수렴 경로는 기관내방(40%), 현장방문(28%), 전화(18%), 온라인(4%) 등의 순이며 애로사항별 유형은 자금(23%), 판로(20%), 공장설립(18%), 기술·인증(10%), 주변 인프라(6%)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 비해 자금지원 과 공장설립 관련은 소폭 감소했으며 판로에 대한 애로는 증가했다.

도는 상반기 동안, 기업SOS지원단이 현장기동반 합동 운영, 기업체 현장근로 체험, 수출중소기업 애로 사항 조사, 공장밀집지역 기업인과의 간담회 개최 등 기업밀착 행정을 중점 추진해 기업인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는 하반기에도 기업인들과 만나 현장의 애로를 수렴할 수 있는 현장행정을 강화함은 물론, 시·군 우수사례 발표대회와 운영성과 평가 등을 통해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기업애로처리 노하우와 정보공유로 기업 애로처리 능력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올해 초 기업SOS넷 기능고도화사업을 완료하고 지식경제부 기업지원플러스(G4B)와 연계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기업인의 접근성을 대폭 개선했다.

도 관계자는 “기업SOS넷은 현재 도내 19개 시·군이 도입해 자체시스템을 구축했으며, 대전, 충남, 포항, 충북도 기업SOS넷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국내 대표적인 기업애로 처리시스템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14. “대기업 범위 상호출자 제한집단으로 한정”

55개의 대기업 상호출자제한집단에 포함된 1,571개사가 적합업종 선정시 기준이 되는 중소기업 범위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동반성장위원회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시 적용되는 대기업의 범위를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실태 조사를 통해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을 적용해 종업원 수 300인 이상 기업을 대기업에 포함시키는 등 품목별로 기준을 신중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달 1일 현재 소속 회사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2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55개다.

이에 따라 근로자 수 300~1천명 수준인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되더라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이 아니면 원칙적으로는 제약을 받지 않게 된다.

과수군 동반성장위 중소기업적합업종 실무위원장은 “중소기업기본법을 적용하면 대기업 수가 너무 많아져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힘들다”며 “실효성을 높이고 중견기업을 육성한다는 취지에서 대기업 범위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동반위는 아울러 적합업종 신청 접수 시스템을 일괄 접수에서 연중 접수로 전환하고, 접수된 품목 중 사회적으로 갈등이 있거나 관심이 많은 30여개 품목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심층 실태조사를 실시해 먼저 합의가 도출되는 품목부터 발표하기로 했다.

두부와 콩나물, PC, 고추장 등 그동안 논란이 됐던 품목에 대해서는 가능한 8월말까지 실태 조사를 마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의 조정을 거쳐 9월초부터 몇 품목이라도 선정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자는 취지라고 곽 위원장은 설명했다.

또 최종 결정 시 적합 또는 부적합이라는 양분적 결론에 국한되지 않고 대기업 진입 자제, 확장 자제, 사업 이익 권유 등 다양한 해법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대기업 사업 제한 범위와 관련해 주문자 상표부착 생산(OEM)이나 수출용 생산 허용에 대해서는 품목마다 실태 조사를 통해 대·중소기업 협의체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15. 中企, 외국인 근로자 못구해 '아우성'

“정부가 외국인 쿼터를 줄이는 바람에 외국인 근로자 배정받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내국인 근로자는 아예 발걸음조차 하지 않고 이대로 가다간 공장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9년째 외국인근로자를 써왔다는 서울의 한 양말업

체 대표는 “예전엔 10명씩 배정받았는데 지금은 5명 밖에 못쓰고 있다”며 “최근 들어 유럽쪽 오더가 늘고 있지만 납기를 못 맞출까봐 못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최소한 원하는 만큼이라도 인력을 줘야 공장을 돌릴 것 아니냐며 하소연했다.

올들어 경기가 회복되면서 중소제조업체들의 외국인근로자 구인난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그야말로 하늘의 별따기 만큼 어렵다는 게 중소기업계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최근 실시한 3분기 외국인근로자 쿼터 7,000명 배정이 신청접수를 시작한 지 단 5일만에 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1,400명 꼴로 배정이 이뤄진 셈이다.

올해 외국인력 도입쿼터는 총 4만명. 지난 1분기 1만 7,000명 배정 때만 해도 하루 850명 수준으로 20일만에 마감됐지만 2분기 1만1,000명은 하루 1,375명 수준으로 8일만에 조기 소진되는 등 2분기 이후 중소기업 인력난이 심각해지고 있는 양상이다.

특히 올 하반기 외국인력 도입쿼터가 5,000명 밖에 되지 않아 중소기업 인력난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여기에다 2008년 대거 도입된 외국인근로자들이 올해 2만명 이상, 내년엔 6만명 이상 계약이 만료돼 출국할 예정이며 고용노동부가 이달부터 불법체류자 고용업체에 대한 제제도 강화하고 있어 자칫 중소기업의 인력대란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처럼 중소기업계의 인력난이 심화된 데는 제조업 가동률 상승 이외에도 정부가 지난 2009년부터 내국인 채용을 늘리기 위해 쿼터를 대폭 줄였기 때문이

라는 분석이다. 실제 정부는 내국인 근로자의 제조업체 취업기회 현상이 여전한 가운데 2008년 6만명에 달하던 외국인력 도입쿼터를 2009년 1만3천명, 지난해 2만 8100명, 올해 4만명으로 3년 연속 공급을 크게 줄여왔다.

중소기업계는 이같은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력 도입쿼터를 대폭 확대하는 등 외국인근로자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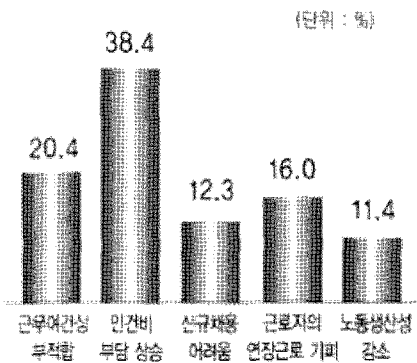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5월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 중인 4만여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외국인력 수요동향을 조사한 결과, 1만 2천여명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신규로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업체들의 수요 3만 4천명까지 감안하면 현재 4만 6천여명이 부족한 상태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올해 경기회복세 등을 감안하면 외국인력 쿼터는 인력수요에 비해 크게 부족한 실정”이라며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가동과 원활한 인력수급 지원을 위해 하반기 외국인력 공급을 최소한 3만4천명 이상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16. 소규모기업 절반, 주40시간제 시행 못해

주40시간제 도입에 따른 애로사항



이달부터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대상이 된 상시근로자 20인 미만 사업장의 절반 이상이 인건비 상승을 우려해 주 40시간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연장근로수당 부담완화 등 정부의 지원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상시근로자 20인 미만인 기업체 310곳을 대상으로 ‘주40시간제 도입에 따른 중소기업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51.8%가 아직 도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입한 업체는 절반에 못미치는 47.2%였다.

특히 미도입 업체중 74.3%가 다른 기업의 도입상황을 보고 대응(52.5%)하거나 대응계획이 없다(21.8%)고 답해 새로 주 40시간제 도입대상이 되는 20인미만 사업장중 ‘준비중’인 사업장은 25.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40시간제 도입에 따른 인건비 변화(예측치)에 대해서는 61.0%의 기업이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비슷하다는 기업이 31.7%, 감소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7.3%에 불과했다.

주40시간제가 도입되에도 불구하고 주5일제 근무를 실시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연속근로가 불가피한 생산공정 및 영업형태 때문(36.8%)이라는 응답과 주문량을 소화하기 위해 불가피하다(34.2%)는 응답이 주를 이뤘다. 이같은 결과로 볼 때 주40시간제 도입에도 불구하고 생산공정이나 주문량 등으로 연장근로를 해야 하는 소규모 기업 입장에서 도입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주40시간제 도입에 따른 애로사항으로는 연장근로수당 등 인건비 부담 상승(38.4%)을 최우선으로 꼽았고 다음으로 근무여건상 주40시간제가 부적합(20.4%), 근로자의 연장근로 기피(16.0%), 인력부족분에 대한 신규채용 어려움(12.3%), 노동생산성 감소(11.4%)등을 지적했다.

제도 시행과 관련해 정부에 비하는 지원책으로는 연장근로수당 부담 완화(48.8%)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29.9%), 주40시간 관련 정보제공(8.5%)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영세소규모 중소기업의 특성상 주40시간제 확대 실시는 부담이 크다”면서 “현재 도입시부터 3년간 한시 적용되고 있는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특례 적용기간을 5년 이상으로 연장하고 외국인근로자 도입규모 확대 등 소규모 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17. 정부, 경제·금융상황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최근 미국 국가신용등급이 AAA에서 AA+로 한 단계 하향 조정되는 등 국제금융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경제·금융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7일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이 참석한 가운데 임종룡 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긴급 경제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향후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황인 만큼 경제금융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만약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체계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차분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대내적으로 역할 분담에 따른 기관별 모니터링 시스템 및 대응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필요할 경우 장관급 회의체인 경제금융대책회의 및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국제금융시장을 24시간 주시하고, 외환·외화자금 시장 및 실물경제 전반에 대한 점검 등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금융위·금감원은 금융합동점검회의를 확대, 개편해 '자금시장팀', '외환시장팀', '자본시장팀'을 운영한다. 또 한국은행은 통화금융대책반을 운영, 금융시장 유동성 상황과 외자 유출입 동향 등을 점검한다.

정부는 특히 외환수급에 대해 자금유출입 동향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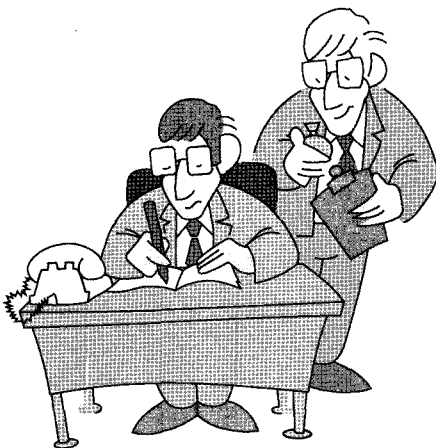
외환보유고 운영상황, 국내외 유동성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대외 불안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기로 했다.

거시경제 측면에서도 물가안정을 정책에 최우선순위에 두고, 내수활성화와 신성장동력 확충 등 기존의 우리 정책기조를 추진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임종룡 차관은 "최근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은 세계경제의 리스크 요인에 대한 시장 참가자의 불안심리가 확산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럽국가의 대응과 미국경제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세계경제의 재침체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또 미국신용등급 하락에 대해서도 "전례가 없는 상황이라는 하나, 무디스와 피치는 미국의 신용등급을 유지하기로 했고, 또한 미국 국채를 대체할 안전자산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주요 투자국들도 미국채 투자를 계속할 의사를 표명하며 미국 경제에 대한 신뢰를 재차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임 차관은 "현재까지 상황을 고려할 때 세계경제의



불안요인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금융시장이 과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며 "최근 우리경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한 국제통화기금(IMF)도 대외 불안요인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했다"고 강조했다.

18. 위기 이후 대외 건전성 지표 대폭 개선

정부는 S&P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에도 불구하고 8일 현재 우리나라 국제시장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외환보유액, 외채구조 등 대외부문 주요 건전성지표가 지난 2008년 위기 이전에 비해 매우 개선된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재정부는 이날 실시한 국고채 5년물 입찰에서 392.2%의 높은 응찰률을 보이며 발행예정물량을 모두 성공적으로 발행했다고 밝혔다. 특히, 외국인은 지난 4일 이후 국채 현물과 국고채 3년 선물에 대한 매수세를 이어가는 등 국고채 시장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2008년과 비교시 유출입 변동성이 큰 잔존만기 1년 이내 채권보유 비중이 36.5%에서 지난 7월 24.7%로 감소 추세로 나타났다.

그 외의 대외부문 주요 건전성 지표도 위기 이후 대폭 개선됐다. 7월 말 외환보유액은 3,110억불로

2008년 8월 말에 비해 27.9% 대폭 증가했고 총외채 대비 단기외채 비중은 2008년 52%에서 지난 3월말 38% 수준으로 크게 감소했다.

경상수지 또한 위기 이후인 2009년 328억불과 2010년 282억불로 GDP대비 3% 내외의 대규모 흑자를 지속했다.

또한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은 위기 이후 지난 2010년 무디스가 한단계 상향조정하고 S&P와 피치는 등급전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어 현 등급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경제·금융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G20, 한·미, 한·중·일 등과의 대외공조를 통해 불안정 요인 발생시 적기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과 02-2150-4713

19. IMF, "한국 경제성장률 '올해 4.5%, 내년 4.2% 전망'"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 4%를 상회하는 4.5%, 내년에는 4.2%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IMF는 5일 '2011년 한국에 대한 연례협의 최종 결과 보고서'를 발표하고 "한국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속한 회복세를 보여 지난해 6.2% 성장했으나, 올해 상반기에는 성장세가 다소 완화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연례회의는 지난 6월 2~17일 우리나라의 거시·외환·금융 등 경제정책 전반에 대해 실시됐다.

IMF는 한국의 물가와 관련해 "물가상승률은 총수요 압력과 식료품 및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한국은행의 목표치인 3±1%를 상회했다"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7월 4.7%를 기록했으며, 근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말 이후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수출은 중국 등 신흥국 성장세로 증가하고 있으나 유가상승 등에 따른 수입증가로 흑자규모가 지난해에 비해 축소됐다"고 덧붙였다.

한국의 통화정책과 관련해선 '여전히 확장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IMF는 "재정정책기조는 중립적이나 통화정책은 금리인상(2010년 7월 이후 125bp)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확장적인 수준"이라며 금리인상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이어 "외환보유액은 3,040억 달러로 올해 6월 기준 세계 7위를 기록했고, 환율은 최근 절상에도 불구하고 위기 이전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며 "풍부한 글로벌 유동성, 견고한 성장 등으로 포트폴리오 투자 관련 자본유입이 증가했으나 은행의 단기외채는 위기 이전보다 적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IMF는 금융부분과 관련해 "은행 자기자본 비율은 14.3%이며 무수익채권 비율은 1.3%로 낮은 수준"

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건설업 및 부동산과 관련해 높은 대출비중을 지닌 8개 저축은행에 대한 예금인출이 발생, 해당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가 단행됐다"고 지적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IMF팀 (02-2150-4841)

